

#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 매년 투자

### 당정청, 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따른 대책 마련... 1조 투자 “이달 중 반도체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할 것”... 경제활력 보장 등 하반기 경제정책도 마련

당정청이 3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8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같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성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간략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왜 정부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부 차원에서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차체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핵심 소재·장비·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대응들은 정부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보장과 일자리 확대에 최대 방점이 찍혀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통과 시 2개월 이내 70% 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장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국민들이 실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9월 이전 완료 등 광

역교통망 투자를 지속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경제·사회 분야 포용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인 1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 확대한 2조3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들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위해 ▲노인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2 출시 마련 등도 강화,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나선다

### 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특별법 개정안도 이달 중 발의 예정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익산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달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3일은 민주평화당 경제최고위원회 ‘미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가습기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정부의 허술한 안전검증 체계로 인하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피해자들을 걸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어, 피해자의 역할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을 겪은 초등학생 박준석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가 터진 이후, 저는 또래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할 정도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국가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종결되었으면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조배숙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행법은 폭넓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과는 반대로, 가해 기업에 유리하도록 피해자 걸러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증폭시키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인건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국회, 365일 상시 일해야”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모두 잘 알 것”이라며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운영 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민선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께도 우리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겐 패널티를 줘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갈등의 장이 돼버린 국회에 대한 해법으로 ‘공존의 정치’를 제시하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 ▲남북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꼽았다.

또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도 강조했다.

이날로 국회 제출 70일째를 맞고 있는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

## 민주 전북도당 “농민수당 지급 농생명 발전 초석”

### 전북도 결정에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평가되는 전북도가 농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가치있

는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농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물론 현재의 수당 금액이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농민수당 지급 결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로 평가되며 농민들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농민단체들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전북도의 농민수당 지급이 농민들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농생명 산업의 기틀을 확보하고 국가의 농업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도당 대변인실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로운 농업 정책이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국가 경제 성장의 기틀이라는 기초를 지켜 나가면서 더 나은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1일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내년부터 연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기로 결정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다문화를 피우는 꽃, 존중이 밑거름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들이 소통되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에 건강한 다문화 꽃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 김용규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